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 고령친화산업

전북, 실버산업 글로벌 거점 도전

지난 4월 26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전북이 잘하는 일들과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먼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 내용을 전북특별법에 담았으며, 담긴 특례들은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가동 준비를 마쳐야 한다. 100일을 맞아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분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싣고 있다. 이번에는 고령친화산업을 들여보고자 한다.

▲일반현황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신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로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산업단지 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친화제품의 연구개발, 임상 실증, 기업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화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중국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실버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 육성될 수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착수

연구·인증·기업육성지원 등 단계별 진행

있도록 특례 실행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추진방향

인구 고령화는 세계 각국의 주요 대응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72.3조원에 이르고, 2030년에는 16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중국 역시 2030년에는 각 3.5조 달러, 2.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전북자치도의 고령친화산업은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며, 관련 부처와도 협

력을 통해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본격적으로 복합단지의 기능과 유사 산업단지와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활동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단, △고

령친화산업정보연구센터, △노화연구센터, △고령친화인재개발원 등 핵심 인프라가 단계별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이전 및 설비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고령친화산업은 해외에서는 이미 미래신산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국 고령산업분야에도 유럽과 일본 등의 다수 외자기업이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전북의 새만금을 시험단지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11월까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4월 30일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관내 청소년 3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은 교통초 6학년 19명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청소년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의사결정의 역할과 기능 소개 △의회 시설 견학 △모의 의회(찬반 토론 및 표결) △참여형 프로그램(2분 자유발언, OX 퀴즈) 등으로 운영됐다.

교실에 학생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던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평기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미래의 주역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견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무주군의회 임시회 10일까지

추경예산·상정 안건 심의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날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 의결청취안 1건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읍면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살피는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날인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최우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군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도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 읍면을 방문하는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시기"라며 "이번 추경이 군민에게 적대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할 것이며, 아울러 읍면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안군의회 동창회 대표위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배양기 위원, 홍의정 위원, 황양의 위원) 등 총 4명을 선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6월에 예정된 제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감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감사의견서를 토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산감사위원들은 사업 집행의 적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 낭비 사항을 중점을 두고 △2023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급급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동창회 위원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효율적인 집행 방안과 개선책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규 의장은 "결산감사는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세심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김관영 도지사, 민생투어 나선다

전북자치도 백년대계·도정 운영방향 공유 위해

오늘 익산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 차례로 방문

민생 중심의 도정 운영을 천명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내 14개 시·군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고스란히 묻어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민생투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 방문에 나서는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정의 운영방향을 비롯해 시군별 특화 발전전략에 대한 답문을 도민들과 함께 다루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 소통행보를 추진한다.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민생투어는 민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도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확대, 참여와 토론이 이뤄지는 쌍방향 소통 간담회 형식이 특징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복합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시군별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시군의회와 기자실 방문 일정을 추가해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도 차

곡차곡 모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관영 지사의 특강을 올해는 도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백년대계와 도·시군별 비전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삶을 살피기 위해 사회복합시설 등 직접 복지현장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도 보인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와 지역민들과 식사를 곁들여 생생한 민생물가 현장을 직접 살펴볼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계획 수립에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솔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나누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의 민생투어는 2일 익산, 13일 정읍시와 고창군, 14일 무주군, 23일 김제시와 전주시, 29일 진안군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날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지자체 발표 평가에 앞서 인근 사무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평가 리허설을 하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전북은 도전한다’

김관영 도지사,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심사 직접 연사로 나서… 특화단지 유치 ‘투혼’

글로벌 바이오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심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깜짝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심사에 직접 연사로 나섰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김관영 지사를 포함해 오택민 미래산업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은경 전 KIST 부원장, 조용곤 전북대학교 교수, 양지훈 넥스트엔바이오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전북의 바이오 생태계 구축 노력과 향후 비전 등을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소개

했다. 참석자들이 김 지사를 실무 국과장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김 지사의 발표 능력은 이날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쟁 자치단체 관계자는 "도지사 직접 나서 수준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며 "경쟁하는 지역의 입장에서 그저 담혹스러울 따름이다"는 후문까지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발표심사를 위해 업무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해 준비에 매진해 왔다.

담당부서는 물론, 산·학·연과 원팀을 이뤄 함께 대응해 왔으며 일부 직원은 폐렴에 걸려 링거 투혼을 발휘하는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후일담도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오가노이드' 분야는 총복, 경기 기초자치단체 4곳(성

남, 수원, 고양, 시흥) 등 총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관영 지사의 직접 발표심사는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하면서 전북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확인한 만큼,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김 지사는 총복 오송과 경북 포항 등 경쟁한 지역과의 경쟁에서 직접 발표심사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지정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김관영 지사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한다. 전북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지정 발표는 이르면 오는 6월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간담회

미주지역 한인네트워크 활용 상호 협력방안 모색

10월 개최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협조 요청도

문화·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전북자치도가 미주지역 한인회와 우호협력 관계를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날 30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해 25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전북자치도와 미주한인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주지역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10월 앞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총연합회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북을 방문해 뜻깊게 생



각한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서로 협력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만남을 통해 도와 미주지역 간에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의 문화·경제 발전상을 알리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미주 한인회와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특조위, 총 9명으로 구성기로

여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특별법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줬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한 법안과 같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

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두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